

# ISSUE & FOCUS

Newsletter 2017-10

## 언론과 사법의 정치화 현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사회는 격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집권 세력 스스로가 지난 5월 대선을 1987년 헌법 체제 내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여당과 야당의 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와 사회 건설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여 과거 정권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청산을 부르짖으며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그 변화의 속도도 가속화 되고 있다.

그러한 변화 가운데 사법의 정치화와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언론의 정치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사법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했다.'라고 강변하겠지만 아래 통계를 보자. 20대 국회의원 선거시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 당 5명, 바른정당 2명, 기타 2명인데,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 의원이 각 3명씩이다. 공정한 잣대

라고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급심 법원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 대표였던 이정희 대표 부부를 ‘종북’이라 비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5백만원을 이정희 대표 부부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 되었으나 수년 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특정인이 친북 성향을 노골화하여 북한의 대남적화전전략에 부합하는 주장이나 활동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형사기소하여 유죄선고를 받을 만한 증거가 없다면 “종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이다. 반면, 헌법상의 자유민주체제를 강하게 옹호하고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강력히 성토하는 시민들을 ‘극우’라는 용어로 매도한 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법원은 ‘극우란 공산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특정인을 비판했다 하여도 민, 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하여 SK 관련 공소사실로 추가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도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증거조사가 대부분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재판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결정했다는 비판도 있다. 급기야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오현석 판사는 “재판도 정치다”라고 하여 국민들이 재판의 공정성,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도 있었다. 법원이 정치의 한가운데 뛰어들면서 특정 정파를 두둔하거나 좌익적 성향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역시 정치에 예측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최근 MBC, KBS 경영진 교체를 목표로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과 야당측 이사들, KBS 이인호 이사장과 야당측 이사들을 사임시키려는 언론노조들의 활동이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다. 야당측 이사들의 직장인 대학교에 찾아가 망신주며 시위하기, 이사들과 가족들에 대한 사생활 탐문, 허위 보도, 이사회 참석을 가로막으며 물리력 행사 등 언론사 직원들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사회에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필자는 법원 판사, MBC 방문진 이사, KBS이사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바로는 우선 현상적으로 볼 때 정치가 서구식 입헌정치를 구현하는 것에 합당한 정도를 초과하여 사회적 가치의 분배나 시스템 운영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 과잉은 어쩌면 조선 이래 한국인들의 정신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악습일 수도 있다. 조선 왕조 내내 실사구시나 민생복리가 아니라 세치 혀로써 정적들을 죽이고 정권을 찬탈해야 직성이 풀리는 정치풍토가 지배해 왔는데 그런 문화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런 풍토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과잉의 악습이 퍼져 나가게 된 원인들 중 하나는 사회 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해야 할 전문적 직업 종사자들, 공무원들이 직업윤리나 개인적 양심에 충실하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사회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을 믿는 세력이 “하늘이 무너져도 정은 세워라”라는 서양 법 격언을 신뢰하는 이들을 압도

하고 있다. 그런 사례는 물대포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백남기 사건에서 부검도 없이 경찰관들을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는 검찰, 시민들이 3번, 4번 박주신 씨를 고발을 해도 박주신을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검찰 등 얼마든지 있다. 필자가 법조인이어서 법률 분야에 관한 사례를 들었으나 다른 이들 역시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추구하는 가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좌익이 우익을 압도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가치 논쟁에 있어 우익은 6.25전쟁 이후 단순히 반공 이데올로기만 주장하며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을 장악하여 왔다. 그것은 1970년대와 같이 6.25 전쟁 종료 후 20여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아 유권자의 대다수가 그 전쟁의 참상을 겪은 상황이었을 때에는 작동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그 잔인했던 현실을 직접 겪지 않은 세대이다 보니 공산 전체주의에 대한 경각심보다 민족, 통일 문제가 더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좌익들이 우익을 부패, 무능, 자본주의 체제에 기생하는 세력 등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익 이론가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왜 자본주의 체제가 궁극적으로 더 정의로울 수 있는지, 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 자유시장경제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사회주의 체제는 자유도, 번영도, 인권도 없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지 교육하지도 홍보하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문화전쟁, 가치전쟁에서 일방적으로 패퇴한 것이다. 법원의 소장 판사들이 좌익 성향으로 흐르는 이유는 이와 같은 가치논쟁에서 우익 진영이 계속 후퇴하는 시절 학창시절과 청춘을 보냈다는 점에 주원인이 있다고 본다. 그들이 그런 의식 가운데 자신들의 결정이 정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으므로 더욱 더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한국사회가 건전하게 우익과 좌익이 공존하며 바람직한 경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는 정당이 혁신되어야 한다. 현대사에 있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왜곡에 대한 방어 옹호를 넘어, 한국 현대사와 20세기 전체주의 투쟁의 관계, 자유시장경제의 중요성, 개인의 자유의 가치와 역사, 국제정치와 한국 사회의 관계 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용기있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투쟁하고 나아갈 정치인들로 우익정당을 혁신하게 해야 한다. 이미 기울어진 언론과 사법 시스템 하에서 일반 시민들의 조직되지 않은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기본적인 출발점은 우익 정당의 건설, 혁신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 핵무기와 한국 내 종북, 친북 세력의 존재와 활동으로 인해 그것이 어려울수록 더욱 더 절실한 과제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